

고령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

: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 · 강화

2003. 2. 19

변 재 관

목 차

1. 고령사회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
2. 고령사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
3. 고령사회가 보건의료 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
4. 고령사회가 복지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
5.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 및 대응방안

별첨: I. 고령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(요약)

1. 고령사회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

가.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

- 저축률 감소로 인한 가용자금의 위축
 - 노년층은 젊을 때 저축해 놓은 돈을 연금 등을 통해 노년기에 주로 소비하는 계층으로 작용하므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률은 감소
 - 민간저축률의 감소는 경제 전체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킴.
 -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정부저축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총저축률은 감소할 것이고, 그 결과 가용자금의 감소, 투자위축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- 자산보유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의 변화
 - 고령자일수록 위험기피도가 증가하고 무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위주의 자산보유 선호
 -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가능성
 - 연금기금 비대화로 인한 채권시장의 왜곡
 - 연금기금의 비대화는 자본시장에서의 연금기금의 영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연금기금의 투자전략이 경제 기초여건과 괴리될 때 자본시장이 경직되고 불안정해짐.
 - 노동투입의 감소로 자본의 생산성이 하락하므로 자산수익률은 저하

나.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

- 경제성장의 둔화
 - 노인인구의 비중 증대로 전체적인 취업구조가 노령화되면서 생산성이 둔화되는 현상
 -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취업자수가 감소

하여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

- 노동공급의 감소, 저축율의 감소로 인한 투자의 위축은 이를 상쇄할만한 획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킴.
- 자본수지 악화
 -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나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, 해외 직접투자(FDI) 및 해외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 - 국내 생산기반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결국 국내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.
 -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 하락

다. 재정에 미치는 영향

- 재정수지의 악화
 - 취업자수의 감소, 연금가입자의 감소, 경제성장의 둔화 등에 의한 조세수입, 세외수입, 사회보장 기여금 등의 감소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킴.
 - 연금수급자의 증가, 노인진료비 지출의 양등,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, 교육비 증가 등은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
-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국민 부담 가중
 -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, 연금체계 위기
 -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험금 납입 증가가 불가피
 - 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의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
 -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개호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.
 - 노인은 유병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 인당 의료비가 비노인층에 비해 3~5배에 이름.
 -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비중이 1980년 19.5%에서 2000년 50.9%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가족의 노인복지 기능이 약

- 화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원에 의존
-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력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
- 국가부채의 누적
 -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악화
 - 이는 또다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속화하여 ‘재정수지 악화 → 경제성장둔화 → 재정수지의 악화’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

라.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

- 실버산업분야의 비중 확대로 산업구조의 변화
 - 건강·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
 - : 재택 의료 및 원격 의료 시스템, 의료복지정보 서비스, 개호(수발) 서비스, 장기요양 서비스, 유전자정보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, 유전자 진단 및 치료법, 인공장기 및 조직의 개발 등
 - 노인인구의 다양한 생활에 대응하여 생활보전형 서비스 분야 확대, 레저 산업 및 주택산업의 다양화
 - : 자산운용대행 서비스, 방법 등 안전관리, 기사대행 서비스, 인생의 각 단계에 대응하여 개조가 용이하고 수명이 긴 주택, 고령자에 적합한 Barrier-free 주택, 고령자용 여행서비스, 고령자용 다세대교류형 레저·리조트 등 이와 같은 서비스 부문을 뒷받침하는 제조업 분야도 성장
 -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2020년에는 1.7%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53.1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인구 구성 변화에 의한 시장수요의 변화
 - 한국의 실버시장은 급격한 성장세
 - 사회의 고령화와 동시에 갈수록 학력이 높은 노인의 증가
 - 노령인구 중 건강한 노인 및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
 - 또한 노령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의 사회적 양극화 초래
 - 노인들의 취업도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

로 비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.

2. 고령사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

가.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

-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
 -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력 인구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
 - OECD(2001) 추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수준으로 일정할 경우 노동력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하며, 이에 따라 총생산증가율도 낮춰짐.
 -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
-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
 - 지난 세기를 통해 선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노동시장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것임. 현재 우리나라 고연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임.
 - 농촌지역 고령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했으며, 그 증가요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 고령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.
-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
 -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‘공식’ 혹은 ‘표준’ 퇴직연령에 비해 훨씬 낮은 정년퇴직연령을 정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 중년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데 다른 국가의 경우 고용 유지율이 대체로 55~59세와 60~64세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~54세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남.
 - 우리나라 고령노동자의 고용 유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학력, 직종,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만, 저학력자의 경우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함.

- 한국 기업이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노동자의 임금이 연공서열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아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
 -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연공서열 임금제로 인해 연령에 따른 임금이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결과 정년퇴직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퇴직이후 임금이 급격하게 감소
 -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규제는 정년퇴직연령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격한 고용보장을 회피하고자 영구적인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리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엄격한 고용보장은 역설적으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저해
 - 사용자가 직원의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직원의 실제능력과 상관없이 연령에 기준하여 결정을 내리는 연령차별의 관행도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.
- 고령인구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및 현황
- 법제도적 실태 : 노인취업과 관련한 법적 기반으로써 1992년 『고령자고용촉진법』이 마련되어 노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
 - 고령자 취업과 관련한 정보지원 실태를 살펴보면, 다양한 알선·훈련기관은 있으나 비체계적·분산적·비전문적으로 그 역할이 미미한 실정
 -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.
 -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있음.

나.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위한 정책방안

- 소득지원체계 개선
- 법정퇴직금 제도
 - 공적노령연금제도
 - 기타 사회보장제도
 - 고령근로자에 대한 EITC 제도 도입

-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
 - 정년의 연장
 - 보상 및 인사관리체계의 개선
 - 고용보장규제 완화
 - 고령노동자의 임금보조
 - 연령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
 - 임금피크제의 실시
-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
 - 향후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평균적인 교육수준 향상으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전망은 개선될 가능성 있음.
 -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 확산
 - 근로여건의 개선
 - 평생교육·훈련체계의 확립
 -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
 - 공공고용정보서비스의 제공

다. 노동인력 감소 대처방안

-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
 -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.3%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9%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
 -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형태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,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인데, 20대 후반과 30대의 노동시장 참가율 감소는 그 자체로도 전반적인 여성경제활동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력의 단절, 인적자본의 마모 등으로 인해 중년 이후의 취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.
 - 남성인구에 대한 여성임금의 비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부족하며 이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
 - 입직, 보수,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 제거

- 인구 및 이민정책
 - 출산장려정책
 -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
 - 외국인력의 유입
- 노동생산성의 제고 및 성장활력 창출
 - 학교교육의 개선
 -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
 - 생산성 향상의 유인제공
 -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할 산업 육성

3. 고령사회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

가. 고령사회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

□ 고령사회에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허약한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급증이 예상되는데, 이들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의 증가가 예상된다.

-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노인 의료비의 증가속도를 보면, 1985~2000년간 83배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,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는 22배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.

- 또한, 건강보험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기간에 4.7%에서 17.4%로 약 4배 수준으로 확대됨.

□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%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- 65세 이상 노인은 비노인계층에 비하여 건강검진수진율이 저조하여 만성질환의

과약 및 정기적인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.

□ 만성질환, 부상·사고 등으로 인하여 옷입기·식사하기·목욕하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호노인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

-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약 15%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기능하락으로 일상적인 생활동작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각종 장기요양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.

- 특히,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약 8% 수준이 치매에 걸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,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임.

나. 대응방안

□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검진수가를 2003년도부터 검진수가를 상향조정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검진수가와 일치
- 기초수급자대상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단계적 확대
- 노년기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, 고혈압, 당뇨,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검진을 강화(검진항목 조정)
- 검진기관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로 재검사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지출의 절감 및 협력체계 구축

□ 치매, 중풍 등 만성질환관리 체계의 구축
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치매 검진(mass screening)을 실시
- 「치매상담센터」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관리 강화

- 지역사회거주노인에 대한 치매상담, 뇌졸중의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,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지도
- 점차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「노인보건센터」로 개편, 노인보건사업 강화

□ 장기요양시설 및 인력의 확보

- 공공 치매요양병원 확충
- 저소득 계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·전문요양시설 확충하되, 노인장기요양 시설 보호 욕구(65세이상 노인인구의 2.0%)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향후 10년을 목표로 단계적 확충추진
- 중산층·서민을 위한 실비 요양보호 확대
-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하되, 재가보호 욕구(65세이상 노인인구의 8.0%)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재가시설을 향후 10년을 목표로 단계적 확충추진
-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및 노인전문간호사제도의 운영기준 마련
-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의 기능확대를 통하여 가정봉사원 뿐만 아니라 간병인, 복지간병인, 가정보우미·간호조무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간병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·운영
- 무료 및 실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속적 지원
- 보건(지)소의 노인 재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증원 및 작업치료사 배치방안 검토 및 노인가정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

□ 공적 장기요양보호시스템의 구축

-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고, 특히 사회보험방식, 조세방식, 개인저축방식 등 장기요양보호의 기본운영체계 설정
-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 실행모형 개발,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

4. 고령사회가 복지서비스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

가. 고령사회가 복지서비스정책에 미치는 영향

□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

-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.9%인 377만명으로,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(Aging Society)에 이미 진입하였고,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.4%에 도달, 고령사회(Aged Society)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
- 2002년 현재 377만명에서 2019년에는 703만명으로, 2026년에는 1,011만명으로 노인인구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절대적인 복지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임.
- 노인은 상이한 생애경험을 갖고 있어 다양한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복지서비스요구도 다양화할 것임.

□ 고령화 속도의 도·농간 격차

-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(읍·면부지역)이 훨씬 빨라,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2000년 14.7%로 이미 고령사회인데 비하여, 도시지역은 5.5%에 불과함.
 -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낮은 수준의 재정력과 복지자원으로 인하여 실제 농촌지역의 서비스 제공능력이 낮은 실정임.

□ 가족의 노인부양능력 약화

-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 가용성(availability)의 저하
 -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,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존자녀의 수가 급감하고 있음.
 - 가족 내에서 주요한 노인부양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로 실제 부양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인구학적 가용성이 저하되고 있음.
- 가족부양능력에 있어서의 도·농간 차이
 -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만의 가구가 도시지역에서는 40.6%인 반면, 농촌지역은 54.8%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가족부양능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나. 대응방안

□ 노인복지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 증대

- 양적으로 증대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이 요구되며,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지출의 증액이 필요함.

※ OECD 주요국 노인복지서비스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약 0.18~2.49%(터키, 멕시코 제외)이나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은 0.08% 수준에 불과함.

□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

- 노인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·조정하고 점검하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.

※ 일본의 경우 1989년의 골드프랜, 1994년의 뉴골드프랜 등 범부처적인(대장성·자치성·후생성 연합)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실현의 기반으로 삼고 있음.

- 실현가능하며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노인 및 고령화와 관련된 전국규모의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함.

□ 예방적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

-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·치료중심·문제해결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적극적인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.

□ 공적 서비스와 가족의 파트너십 구축

-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,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임.
-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인식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, 가족의 노인부양의 '가능성'을 '현재화'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.

□ 노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 환기

- 가족내에서나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, 노인인권 침해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함.

□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노인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

- 여성노인: 사회적 약자로 생활해온 여성노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

적 부양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.

-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을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,
 - 관절염, 만성요통과 같은 여성의 특유질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.
 - 더불어 여성노인이 평생 수행해온 보호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인정과 그에 기초한 연금제도의 개선 등도 요구됨.
- 농촌노인: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보건 및 복지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도농 간 수준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.

5.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 및 대응방안

가. 고령화 진행에 따라 예견되는 사회문화적인 변화

☐ 노인의 교육수준의 증대

- 현재 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74.5%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,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4.9%에 불과함.
 - 반면,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33.7%만이 초등학교 이하, 44.4%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으로 추계 됨.
- 현재 노인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연금을 비롯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져 경제력이 증대될 것임.

☐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의 제고

- 현 세대 노인들에 비하여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능력증대 등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.
 - 2019년에 노인세대를 구성하게 될 40~59세 연령층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20% 전후이며, 신문구독 및 독서인구의 비율도 높아 새로운 지식의 습득능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.

☐ 문화생활에의 욕구 증대

- 현세대 노인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문화향유기회의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생활에의 욕구가 낮으나, 미래의 노인세대는 문화 및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

것으로 예견됨.

-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.
- 이러한 세대간 차이가 자원분배에 있어서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세대가 'win-win'할 수 있는 세대간 이해가 필요함.

나. 대응방안

□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

- '일'과 '여가'의 적절한 균형이 선호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이 요구됨.
- 노인의 문화여가적인 측면의 욕구 증대에 따라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예견됨.
 - 문화여가 서비스는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공-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.

□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

-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, 노동의 시기인 청년기,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연령 분리적인 사회에서
 - 교육, 노동,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.
- ※ 미국의 경우, 1967년에 연령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, 유럽연합은 암스테르담조약에서 모든 소속국가들이 2006년까지 연령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였음.
- ※ 일본의 경우, 정년제를 채택하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재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.
- 세대간의 경험의 간격과 가치관의 차이를 매울수 있는 세대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.

□ 평생교육사회로의 전환

- 학교교육 중심의 사회에서 평생교육사회로 전환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, 노인이 사회에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될 수 있음.

- 고학력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, 대학교가 교육서비스 대상으로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등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기반구축이 요구됨.

□ 무급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로의 전환

- 시장에서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뿐만 아니라 무급노동도 사회의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.
- 삶의 의미를 고양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며, 생산적인 노화를 촉진함으로써 노인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.

□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

- 노인을 무조건 '비생산적'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·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.
-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화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적인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임.

〈별첨 I〉 고령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(요약)

구 분	현황 및 문제점	대응방안
고령사회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	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- 저축률의 감소로 인한 가용자금의 위축 - 자산보유구조의 변화 ☐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- 경제성장둔화 - 자본수지악화 ☐ 재정에 미치는 영향 - 재정수지의 악화 -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- 국가부채의 누적 ☐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- 실버산업분야의 비중확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- 인구구성변화에 따른 시장수요 변화 - 1차산업 중심에서 3차산업(서비스산업) 중심으로 변화	☐ 주식투자비중의 확대 - 연금기금에 의한 채권시장의 왜곡을 완화하고 연금수익성의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서는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 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-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 차원에서 내부거래 규제, 소액주주 보호 등 주주의 권익 및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각종 법·제도의 개혁이 촉진되어야 함. ☐ 지역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Community Job의 창출
고령사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	☐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 -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로 노동력 인구 증가에 부정적 영향 ☐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-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- 농촌지역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증가 ☐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- 공식 혹은 표준 퇴직연령에 비해 훨씬 낮은 정년퇴직연령 - 중년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. - 학력, 직종, 업종을 불문하고 고령노동자 고용유지율의 급격한 하락 - 고용의 불안정성은 저학력자의 경우 더욱 심각 - 연공서열임금제로 인해 연령에 따른 임금이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결과 정년퇴직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퇴직이후 임금이 급격하게 감소 - 엄격한 고용보장은 역설적으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	☐ 소득지원체계 개선 - 법정퇴직금 제도 - 공적노령연금 제도 - 기타 사회보장제도 - 고령근로자에 대한 EITC 도입 ☐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- 정년의 연장 - 보상 및 인사관리체계의 개선 - 고용보장규제 완화 - 고령노동자의 임금보조 - 연령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- 임금피크제의 도입 ☐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- 향후 고령인구의 평균적인 교육수준 향상은 고령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전망 개선에 영향 -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 확산 - 근로여건의 개선 - 평생교육·훈련체계의 확립 -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- 공공고용정보서비스의 제공

구 분	현황 및 문제점	대응방안
고령사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	☐ 고령인구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- 고령자 취업과 관련한 정보지원 실태가 비체계적·분산적·비전문적으로 그 역할이 미미한 실정 -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무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.	☐ 노동인력 감소 대처방안 -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- 인구 및 이민정책 - 노동생산성의 제고 및 성장활력 창출
고령사회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	☐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☐ 만성질환관리 대상인구의 증가 ☐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증가	☐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☐ 치매, 중풍 등 만성질환관리 체계의 구축 ☐ 장기요양시설 및 인력의 확보 ☐ 공적 장기요양보호시스템의 구축
고령사회가 복지서비스 정책에 미치는 영향	☐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 ☐ 고령화 속도의 도·농간의 격차 ☐ 가족의 노인부양능력 약화	☐ 노인복지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증대 ☐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☐ 예방적 서비스 체계로의 전화 ☐ 공적서비스와 가족의 파트너쉽 구축 ☐ 노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 환기 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노인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
고령사회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	☐ 노인의 교육수준의 증대 ☐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의 제고 ☐ 문화생활에의 욕구 증대 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.	☐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☐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☐ 평생교육사회로의 전환 ☐ 무급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로의 전환 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

